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정책위원회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Policy Board)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Tel. 02.3675.1987 Fax. 02.766.6025 <http://kfhr.org>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

2013년 6월 3주차(2013.06.17-06.23)

요약(Summary)

○ 한·미 FTA의 독립적 검토 기구에 의한 수입의약품 가격 인상 논란(6/18)

- 한·미 FTA 발효 이후 도입된 독립적 검토 기구가 미국산 치료재료의 가격 인상 결정 나온 후 치료재료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10% 올리기로 결정
-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가격에 대해서도 독립적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한·미 FTA가 최초
- 다음달 건정심은 다음달 해당 수입 치료재료인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가격 인상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

○ 6월 국회(6/22)

- 6월 보건복지위 법안 심의에서 의료계의 논쟁적 법안이 심의되지 않은 채 법안소위의 모든 일정 종료

○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정조사 거부 입장(6/18)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의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

- 환자의 필요에 의한 선택진료는 27%(6/18)

- 내년 건보료 1.7% 인상(6/18)

- 토요일산제 시행으로 내년 의원 수가 4.5% 인상(6/19)

-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추진(6/18)

- 국회입법조사처, 지역 병상총량제 한계 언급(6/21)

- 미국의사협회, "비만은 질병"(6/21)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확대(6/21)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 추진(6/21)

- 사회보험노조, 민주노총 탈퇴 합의(6/18)

- 남원의료원 새 의료원장 모집(6/19)

- 치과 의사 레이저치료 합법 판결로 직능단체간 갈등(6/22)

- 인도제약사 선 파마(Sun Pharma), 미국에서 글리벡의 제네릭 판매위해 노바티스에 소송제기(6/18)

-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6/18)

- 김미희 의원, "글리벡 400mg 보험등재 필요"(6/21)

- 미국, 총 의료비 8% 불필요한 지출 · 환자부담 가중(6/21)

-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6/22)

- 건보공단 이사장 김종대, 공공제약사 가능성 언급(6/22)

- 일본, 의사 제네릭 처방시 인센티브 제공(6/22)

- '토요휴무가산-만성질환관리제 빅딜설'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발 확대(6/20)

- 대만서 H6N1형 AI 첫 인체감염 사례(6/21)

- 전의총 "건보재정 흑자 의원 활성화에 투입하라"(6/21)

- 대한전공의협의회, 원격의료 허용 법안 철회 요구(6/22)

1. 한·미 FTA의 독립적 검토 기구에 의한 수입의약품 가격 인상 논란(6/18)

- 한·미 FTA 발효 이후 도입된 독립적 검토 기구가 미국산 치료재료의 가격 인상 결정 나온 후 치료재료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10% 올리기로 결정
-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가격에 대해서도 독립적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한·미 FTA가 최초
- 다음달 건정심은 다음달 해당 수입 치료재료인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가격 인상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도입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독립적 검토 기구'(독립적 검토 기구)로 인해 의료기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가격 인상에 반대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치재위)는 최근 독립적 검토 기구의 가격 인상 결정이 나온 뒤 미국산 치료재료의 가격을 10% 올리기로 입장을 바꿨다. 다음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가격 인상이 최종 의결되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은 커지게 된다. 독립적 검토 기구가 치료재료 가격을 인상시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보험상한가 인하결정에 반발한 치료재료 보유업체들의 '독립적 검토' 신청이 폭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복지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짐머코리아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치료재료 보유업체 67곳이 67건(2670여 개 품목)의 '독립적 검토' 신청을 제기했다. 약제는 단 한건도 없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책임자는 검토자 인력풀 중 한 명을 지정해 재검토를 진행한다. 이들 업체는 복지부가 원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상한가를 조정하기로 하자 이에 불복해 일제히 재검토를 요청했다.¹⁾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준영메디칼은 지난해 “아큐트랙 스크루(Acutrak Screw)는 2011년 재평가 과정에서 동일 품목군으로 분류된 다른 제품에 비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으로 조정이 됐다”며 해당 제품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인상을 치재위에 요구했다. 이 제품은 미국 기업인 아큐메드가 생산하는 관절고정장치로 준영메디칼이 한국으로 수입하고 있다. 치재위는 하지만 ‘동일목적 유사재료’와 비교할 때 특징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조정신청을 기각했다.

준영메디칼은 가격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월17일 독립적 검토 기구의 문을 두드렸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민간 전문가가 한번 더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는 독립적 검토 기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독립적 검토 기구는 지난 4월16일 준영메디칼의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독립적 검토 기구가 치재위의 결정을 반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준영메디칼에서 지난 5월 제품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논문 3개를 제출했다. 더군다나 독립적 검토 기구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다음달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 인상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²⁾

한편 '독립적 검토절차'는 복지부가 발주하는 연단위 연구용역 형식으로 검토책임자와 검토자 풀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검토책임자는 고원규 전 대학약사회 보험이사이며, 검토자 인력풀은 경북의대 김신우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됐다.³⁾

2. 6월 국회(6/22)

○ 6월 보건복지위 법안 심의에서 의료계의 논쟁적 법안이 심의되지 않은 채 법안소위의 모든 일정 종료

그 어느 때보다 논쟁적인 의료계 이슈가 상정돼 치열하게 심의될 것으로 점쳐졌던 6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가 싱겁게 끝났다. 대부분의 법안이 심의되지 않았고, 논의됐어도 구체적이지 않았던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는 20일 오전, 6월 상임위 법안소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6월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22개의 법안을 지난 20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적지 않지만 정작 의료계가 주목한 법안들은 대부분 논의되지 않았다. 애초 6월 상임위에서는 ▲오제세법(리베이트 처벌 강화법+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제외법 ▲의료분쟁 조정 시 자율성 강조법 ▲지방의료원 관련법 ▲공중보건 약사제도 도입법 ▲간병비 급여화법 등 의료계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중 심의된 것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오제세법’ 뿐이다. 이조차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와 관련해 단 1시간도 논의되지 않은 채 “현재 운영 중인 대한병원협회의 TFT 활동을 지켜보자”는 수준에서 그쳤다. 오제세법에 묶여 있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은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서 심의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⁴⁾

3.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정조사 거부 입장(6/18)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의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의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지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광역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는데 국회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법상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대한 사안은 도의회의 도정감사 대상이다. 굳이 조사를 하겠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요구하면 되고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또 "현재에 심판을 청구하면 당장 재판이 시행되지는 않지만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게 없고 의료원 폐업이 공익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⁵⁾

1. 환자의 필요에 의한 선택진료는 27%(6/18)

환자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선택진료는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러는 병원비를 결산할 때 선택진료인 것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었다.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민주노총 등 6개 단체로 이루어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대형병원 이용경험이 있는 전국의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동안 면접 및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택진료 이용 계기는 본인 및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진의를 선택했다는 응답은 27%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다른 병원의 의사가 추천해주어서 선택했다는 응답비율이 9%로 나타났고, 최초 외래 진료 예약이나 수술, 입원 시에 서류 작성하면서 병원이 권유해 선택진료를 이용하게 됐다는 응답비율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청한 적이 없는데 병원비를 낼 때 선택진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비율도 14%로 조사되었는데 선택진료의사의 진료행위 외에 각종 검사비에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분석했다.

아울러 선택진료제도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그친 반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선택진료비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보통이다’라고 중립적 답변을 보인 응답자와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8%와 20%의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선택진료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 또는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판단했다.⁶⁾

2. 내년 건보료 1.7% 인상(6/18)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월평균 1570원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360원 늘어날 예정이다. 동네의원과 약국의 토요일 기본 진료비도 오른다. 하지만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재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인상된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4월 기준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이 오른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6%였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⁷⁾

3. 토요가산제 시행으로 내년 의원 수가 4.5% 인상(6/19)

의원급 요양기관의 토요가산제 시행으로 내년도 의원 수가 실질적으로 4.5% 인상효과를 보게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와 토요가산 전일확대 등 주요사안이 의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에서 201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은 전년 대비 3.0%의 수가 인상을 토요가산을 토요일 전일로 확대하는 안건이 최종 통과함에 따라 관련고시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작업(최소 90일 소요)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10월경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토요가산을 수가기준으로 환산하면 1.5%의 인상효과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총 4.5%의 수가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⁸⁾

4.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추진(6/18)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의사에게 부여된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되,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성 또는 부작용이 의심될 때에는 자신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돼 있고, 하위법에서 업무의 범위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각종 검사 등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현재 의사의 처방으로 이뤄지고 있는 업무관행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현실도 개정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가 처방 또는 검사의뢰서 등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도라는 용어를 '처방·의뢰'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등은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의료기사의 독립적 영업권을 인정하게 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칫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⁹⁾

5. 국회입법조사처, 지역 병상총량제 한계 언급(6/21)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의 대안으로 대두된 '지역별 병상총량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지역 병상 총량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현재 병상 공급의 증가와 함께 입원 이용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규모가 영세한 의원인 경우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지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료자원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지역별 병상 총량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급자를 통제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규제적 성격 때문에 이해집단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병상 총량 규제는 공권력이 진입장벽을 설치해 먼저 시장에 진입한 공급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반론에 부딪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병상 수급은 양적 수준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원의 병상이용률이 20~30% 수준이며 재원일수는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병상활용의 질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의원과 병원이 모두 외래 진료와 입원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경쟁력 낮은 의원급 병상에서 입원기간을 늘리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의 병상 관련 문제는 병상의 기능별 구성과 병상 간 연계를 조율하지 못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총량 규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김 조사관은 "병상 자원관리 정책 수립 시 병상지원이 과잉·중복투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기관 간의 기능재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¹⁰⁾

6. 미국의사협회, “비만은 질병”(6/21)

미국의사협회(AMA)가 비만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비만 치료에 많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에서 비만치료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만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의료계와 보건당국간 견해차가 커 급여화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현지시간) AMA 대의원회의는 미국 시카고에서 회의를 열고 비만을 ‘우려되는 건강상태’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격상시키기로 의결했다. AMA는 결의문에서 “비만은 신진대사 및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의 상태이며 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미국 국민 세 명 가운데 한명 꼴로 영향을 받는 비만과 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AMA는 “비만을 질병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습관의 결과로 보는 것은 개인이 담배를 피우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폐암이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만의 질병 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¹¹⁾

7.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확대(6/2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2012년 10억원(1만명)에서 올해 15억원(1만5,000명), 그리고 오는 2017년까지 30억원(2만8,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치료에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과 함께 오는 2014년부터 간병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간병비 지원 대상은 중증 피해자 및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 등이다. 아동 피해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및 치료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폐지하고,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겪는 심각한 후유 증상에 대한 심리 치료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해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했다.¹²⁾

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 추진(6/21)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단일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과체계 단일화 추진 일정에 대한 민주당 이연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예상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개선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더욱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설치해서 현실적 개선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소득 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한 부과방법이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소비기준 부과방안, 건강위해품(목적세) 부과방안 등 크게 세 분류의 방안을 두고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크게 세 분류에서 세부적으로는 55개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7월부터 운영되는 개선기획단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에 불형평성이 크게 두드러진다”며 “단적인 예로 직장가입자의 5살 아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5살 아이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 파악이 안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공단)가 가진 자료를 토대로 하면 전 국민 79.7%의 소득이 파악가능하지만 국세청 자료로는 95%에 가까운 파악이 가능하다”며 “나머지 5%는 대부분 농어민들로, 이들에 대한 부과체계는 가입자위원회를 뒤서 민주적으로 합의토록 하는 게 선진국의 예”라고 말했다.¹³⁾

의료 산업

1. 사회보험노조, 민주노총 탈퇴 합의(6/18)

건강보험공단의 '한지붕 두가족'이었던 사회보험지부와 직장보험노조가 통합에 최종 합의했다. 2000년 7월 통합 건보공단 출범 이후 13년만의 일로, 1만여명의 거대 단일 노조 탄생이 실현된 것이다.

사보노조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양대 노조가 내년 10월 1일자로 외견을 우선 통합한 뒤, 2015년부터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등 조직체계를 일원화시킨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양대 노조 대표자를 통합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통합준비위원회는 양대 노조 중앙집행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4월 중순 안에 규약소위를 구성해 통합 규약과 규정, 규칙안을 만들어 10월 1일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통합 위원장과 본부장을 11월 30일까지 선출하고, 12월 20일까지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양대 노조 측의 설명이다.

통합을 위한 준비는 그간 분리된 노조 청산 작업으로도 이어진다. 양 노조는 청산위원회를 내년 9월 이전까지 구성하고 12월 20일까지 모든 청산을 마칠 예정이다.¹⁴⁾

2. 남원의료원 새 의료원장 모집(6/19)

노사 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원의료원이 새로운 의료원장 임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남원의료원은 정석구 의료원장이 노조와의 단체협약 해지를 2차례 선언하며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작년 말에는 27일 간 파업이 진행되기도 했고, 지난 5월 9일부터는 노조가 정석구 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라북도는 현 남원의료원장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28일까지 차기 원장후보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차기 원장 후보로 정 원장이 공모에 재도전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석구 원장이 최근 직원들에게 ‘남원의료원장에 재임명될 것이므로 잘 보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 원장은 임기 3년동안 남원의료원의 적자 증가폭이 크게 줄었고, 공공성 평가에서 최상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경영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정 원장의 경영을 ‘잘했다’, ‘못했다’로 나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임 원장 경영 당시 적자가 49억 증가했던 것에 비해 정 원장 재임기간에는 적자가 3억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석구 원장은 남원의료원 문제 당사자 일뿐만 아니라 의료법, 약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받기도 했고 개원의 시절에는 보험료를 불법 부당 청구해 국민세금을 훔친 혐의로 제재를 받은 파렴치한 전력도 있다”며 재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정 원장의 재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14일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김완주 지사가 지금이라도 남원의료원 운영에 있어 공공성 회복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당장 정 원장을 퇴진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에 전북도 관계자는 “노조의 해임요구가 재임을 막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추천위원회에서도 전달받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¹⁵⁾

3. 치과의사 레이저치료 합법 판결로 직능단체간 갈등(6/22)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의료계와 치과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치과의사들의 미용시술을 허락하는 판결이다.

치과의사에게 피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자칫 잘못하면 진료영역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피부 치료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법원의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의사들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해도 무방하다는 억지 논리도 합법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사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상고 시에 의학적인 근거를 밝혀내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판결을 두고 치과의사협회가 아전인수격의 주장을 펼친다면 의료체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치협은 “미용시술은 의사들의 성역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동등한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인 치협을 폄하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치협은 의협을 보건의료계의 동반자로서 각종 보건의료 현안해결에 함께 노력해

왔으나 이번과 같이 장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 의협과 치협, 나아가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대립으로 번지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의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¹⁶⁾

What they say

* '2013 대한공중보건 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

- 의협 송형근 부회장,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 의사협회 송형근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이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현실을 보여주는 것", "수가가 낮아 엉망이다 보니 치과의사를 포함해 한의사까지 자신들의 진료 영역을 벗어나는 비급여 진료를 하려고 한다",

-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미용·성형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 "지난 2000년도 의약분업 실패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의사집단을 깎아 내리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는 집단'으로 프레임을 맞춰 왔다"

- 이화연대 권복규 교수, "지난 2000년 의약분업때 힘을 모아보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움츠러들어 결국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며 "젊은 의사들이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처럼 미용, 비만, 성형으로 뛰어들어 꿈꿔 왔던 의사로서의 삶과 멀어지게 될 것"¹⁷⁾

약계 뉴스

1. 인도제약사 선 파마(Sun Pharma), 미국에서 글리백의 제네릭 판매위해 노바티스에 소송제기(6/18)

6월초에 인도제약사 선 파마(Sun Pharma)는 노바티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선 파마는 2007년 8월에 노바티스에게 제네릭 판매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통보하고 글리백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선 파마는 2006년 6월에 미국에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백 100mg과 400mg의 제네릭에 대해 판매허가신청을 했다. 노바티스가 선 파마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45일내에 선파마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았으므로 이는 제네릭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선 파마는 주장하며 미국법원에 확인판결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국가이다. 헤치-왁스만 법에 따르면 후발업자가 미 FDA의 오렌지북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의약품과 똑같은 약(제네릭)을 판매하려고 허가신청을 할 경우 특허침해하지 않거나 해당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권자에게 통보를 해야한다. 통보를 받은 특허권자가 45일내에 후발업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걸면 후발업자의 판매허가는 후발업자가 승소할때까지 혹은 30개월간 정지된다.

선 파마가 문제삼은 글리백 관련 특허는 '051특허'이다. 선 파마는 '051특허'에 대해 특허무효판결이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특허침해소지를 떠안고 가야한다. 선 파마가 노바티스에게 통보한지 6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난 4월 1일 글리백 특허가 무효하다는 인도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직후이기때문에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¹⁸⁾

2.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6/18)

EU가 6월 11일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에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을 8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EU는 미국과 함께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하는데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었다. 이렇던 EU가 정말로 환영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EU는 성명에서 “이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유예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빈국은 2016년까지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2002년에 합의되었던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최빈국들이 2021년까지 트립스협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약품특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까지라고 뜻을 밝혔다.

이는 트립스이사회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부분이다. 트립스이사회가 합의한 결정에는 의약품 특허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는 의약품특허도 2021년까지 유예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EU처럼 2002년의 결정과 2013년의 결정은 별도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2016년에 최빈국은 다시 의약품특허 보호를 유예하기위해 한바탕 싸움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최빈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을 부분이 의약품과 건강권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싸움은 2016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02년 당시 최빈국의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은 2005년까지였다. 하지만 의약품특허와 공중보건간의 균형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2002년 6월에 트립스이사회는 최빈국이 트립스협정 중 제5조(특허)와 제7조(미공개정보의 보호)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행시점을 2016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유예기간동안 모든 것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최빈국은 이 연장된 기간동안 의약품관련 특허발명을 출원하는 것은 허용해야하고, 신약이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된다면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 나라에서 5년간의 독점판매권(exclusive marketing rights)을 가질 수 있다.¹⁹⁾

3. 김미희 의원, “글리벡 400mg 보험등재 필요”(6/21)

만성골수병치료제 '글리벡'이 저함량 100mg만 보험 등재가 되고 고함량 400mg은 보험이 안되는 문제가 국회 복지위에서 지적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글리벡 400mg의 보험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단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글리벡 100mg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400mg 고함량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저함량 약을 여러번 먹는다. 그러나 100mg 약을 4번 먹으면 400mg를 한번 먹는것보다 가격이 더 높고 코팅제를 싸고 있는 철 성분을 환자들이 여러번 복용하면 철중독을 일으킬수도 있다"며 고함량 제제의 급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몰랐으며 "복지부의 명령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하는데 400mg에 대한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관련 기관과 부처에 협조를 구해 사안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²⁰⁾

4. 미국, 총 의료비 8% 불필요한 지출·환자부담 가중(6/21)

잘못된 약물복용으로 인해 미국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매년 2,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매년 지출되고 있는 전체 의료비 가운데

8% 가량이 불요불급한(avoidable) 입원, 외래진료, 처방전 발급 및 응급실 내원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IMS 헬스社 산하 의료·정보학연구소(IHI)는 8일 공개한 ‘미국 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실태: 보다 책임감 있는 약물복용을 통해 2,0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복약 미준수에서부터 증거기반 약물치료의 지연, 항생제 오용, 약화사고, 충분치 못한 제네릭 복용, 고령층 환자들의 과잉투약 관리부재 등 6개 항목에 걸쳐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유발하고 있는 원인들을 면밀히 파헤쳤다. 특히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자원들(resources)이 이용되면서 연간 입원 1,000만건, 외래진료 7,800만건, 처방전 발급 2억4,600만건, 응급실 내원 400만건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최적의 약물을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방법으로 복용할 경우 이 같은 현실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S 헬스社 산하 의료·정보학연구소의 머레이 아이트켄 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적절치 못한 약물복용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환자부담의 가중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비가 현재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2,400만여명에게 쓰여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복약 미준수를 꼽고, 이로 인해 매년 1,050억 달러 안팎의 불필요한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치료가 지연됨에 따른 의료비 누수액 또한 연간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다.

항생제 오용으로 인한 내성문제로도 연간 340억 달러의 비용지출이 뒤따르고 있으며, 연간 3,100만건 상당의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 탓에 10억 달러가 추가로 새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²¹⁾

5.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6/22)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릭스’를 맞은 일부 환자들에게서 급성과중성뇌척수염과 길랑-바레증후군 등과 같은 중대한 신경 부작용이 잇따랐다. 일본에서는 여학생들이 ‘서바릭스’를 맞은 후 고개를 가누지 못하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거나 발목 통증으로 보행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회사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접종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 그만큼 또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다. 양면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사례가 14건 보고됐지만, 일본처럼 심각한 부작용은 그동안 없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자궁경부암 백신과 부작용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실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의 부작용과 함께 3차례 접종에 5~60만원으로 비싼 백신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판매가 시작된 2007년경부터 부작용과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2008년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는 기획 기사를 통해 백신의 효과가 정확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데다 비싼 만큼 제값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에 관한 보고서 9749건을 분석한 결과 94%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으나 나머지 6%는 혈액응고, 마비,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7802건의 크고 작은 백신 관련 부작용이 보고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상황인데도 백신이 판매 초기부터 인기를 끈 것은 제약사의 과도한 마케팅과 로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으면 자궁경부암을 영원히 100% 예방한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지적한다. 자궁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200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자궁경부암 발병에는 15가지가 관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HPV16과 HPV18이 전체 자궁경부암의 70% 정도를 일으키는데 ‘서바릭스’는 이 두 가지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고, 또 다른 백신인 ‘가다실’은 이이 더해 HPV6과 HPV11에도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다른 11~13가지에는 효과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HPV16과 18형에 감염될 확률이 지극히 낮고, 최근 이웃나라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전에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좋다”며 “백신은 마법이 아니며 정기검진만 제대로 받아도 자궁암 위험을 현격히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²²⁾

6. 건보공단 이사장 김종대, 공공제약사 가능성 언급(6/22)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공공제약사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건보공단 현안보고에서 공공제약사 추진 현황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공공제약사 추진 사항을 묻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그 동안 희귀 의약품 공급 문제와 의약품 유통의 비효율성 등 때문에 제약 부문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공단이 이에 공감해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공공제약사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공제약사 추진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전문가에게 제약 분야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고, 얼마 전 결과를 접수 받았다”며 “현재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공단에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²³⁾

7. 일본, 의사 제네릭 처방시 인센티브 제공(6/22)

일본은 2년마다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약가가 할인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약사의 대체조제 외에 의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인센티브가 부여돼 제네릭 의약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다카시 후쿠다 박사는 19일 의료기술 급여결정에 대한 외국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한 제27회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다카시 후쿠다 박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판매되고 있는 약 50%의 약값이 평균보다 높아 2년마다 의약품 가격을 할인 조정하고 있다. 또한 약값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약사 대체조제는 물론 의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약국 제네릭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도입 후 2012년에 처방비용제도를 신설, 의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네릭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도 처음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 의약품의 70% 정도로 산정되며 동일 성분의 제네릭이 있을 경우 가장 낮은 약제값이 기준으로 책정된다.

후쿠다 박사는 “2011년 9월 기준으로 일본의 제네릭 사용량은 전체 의약품 중 22%를 차지하지만 보건의료비 지출의 8.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

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네릭 처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지만 신약개발 의지가 약하고 신규 약제의 진입 허가가 복잡해 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후쿠다 박사는 “새로운 약이 일본에 도입될 때 여러 가지 설정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승인된 약제가 일본에 들어오기까지 통상 2~6년이 소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²⁴⁾

기타 뉴스

1. ‘토요휴무가산-만성질환관리제 빅딜설’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발 확대(6/20)

대한의사협회가 ‘토요휴무가산-만성질환관리제 빅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내홍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의협이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소집했지만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불참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토요휴무가산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를 위해 3개의 부대조건을 받아들인 의협의 결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부대조건에 대한 의협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인 상임이사회, 여론 수렴기구인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치열한 토론 없이 노환규 회장과 일부 측근들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이 의견을 모았고 노 회장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는 23일 오후 소집된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그는 “토요휴무가산제 건정심 통과는 지난 수년간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발상 전환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금번 의협의 토요휴무가산제 건정심 통과를 위한 부대조건인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 비급여 정보 공개(영수증 모형 개발), 야간진료활성화에 대한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민의에 따르기로 했다”고 했다.²⁵⁾

2. 대만서 H6N1형 AI 첫 인체감염 사례(6/21)

대만에서 그동안 조류 사이에서만 주로 감염이 확인된 H6N1형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인체 감염 사례가 나왔다. 대만 위생서(署) 산하 질병통제센터(CDC)는 21일 감기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은 중부 장화(彰化)현의 20세 여성의 가검물을 정밀 검사한 결과, H6N1형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CNA)이 전했다.

H6N1형 AI의 인체 감염이 확인된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첫 사례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통상적으로 야생 조류와 가금류 등에서만 발견됐다.

당국은 최근 중국에서 확산된 H7N9형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치명성은 없지만 가금류 농장 등에서 방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지난달 5일 발열과 기침, 두통 등의 증세를 처음 보인 뒤 사흘 후인 같은 달 8일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사흘 만에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 이 환자는 아침 전문 식당에서 일해 왔으며 해외를 방문하거나 가금류 등과 접촉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통제센터는 이 환자와 접촉한 36명을 상대로도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당국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 처방이 관련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다만 농업위원회와 지자체는 가금류 농장 등에 대한 자체 방역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²⁶⁾

2. 전의총 "건보재정 흑자 의원 활성화에 투입하라"(6/21)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원일수와 매출이 지난해 동기와 대비했을 때 감소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료에 대해 개원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1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심평원은 수가협상 이후 진료비 통계지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내원일수와 매출이 작년 대비 감소했다고 뒤늦게 발표했다"며 "의료기관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가협상에서 슈퍼갑의 역할에만 충실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심평원은 '진료비 통계지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내원일수가 작년대비 6.1% 감소,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개원가는 건보공단 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 악화를 알면서도 수가협상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전의총은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자료를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공유하도록 하여 공정한 수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에 즉시 투입하라"며 "건강보험 재정 흑자액을 다음연도 수가에 100% 반영하라"고 강조했다.²⁷⁾

3. 대한전공의협의회, 원격의료 허용 법안 철회 요구(6/22)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원격의료 대상 범위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으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심재철 의원)에 대해 "대면진료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범위 확대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 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현행법과 중복되는 전형적인 '옥상옥(屋上屋)'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이미 의료법 33조에 의해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나 공익적인 필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 의료기관 밖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약사법 5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약국 또는 점포에서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에 '이동형 전자 장비', '전자 처방전'에 관한 정확한 개념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졸속 법안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무의촌 해소 및 의료서비스 확대, 의료산업 발달 등을 위해 원격의료를 확대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미 읍·면·리·동까지 의료기관이 들어차 있어 의료 접근성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의료 사각지대'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낮은 수가정책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히려 환자 불편개선이 목적이라면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선택분업제도로 전환해 의료소비자들이 약을 조제 및 구입할 수 있는 장소(병원 및 약국)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반약 슈퍼판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²⁸⁾

1) '의료재료 업체의 역습?...'독립적 검토' 신청 폭주', 2013.6.19, <데일리팝>

2)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 결정 뒤 의료기기 값 인상하냐', 2013.6.18, <경향신문>

3) '의료재료 업체의 역습?...'독립적 검토' 신청 폭주', 2013.6.19, <데일리팝> 재인용

4) '변죽만 울린 6월 보건복지 법안 심의', 2013.6.22, <데일리메디>

- 5) '홍준표 지사 "공공의료 국정조사 응할 수 없다"', 2013.6.18, <라포르시안>
- 6) '환자 필요에 의한 자발적 선택진료 27%에 그쳐', 2013.6.18, <메디컬투데이>
- 7) '내년 건보료 1.7% 인상... 직장인 1570원 더 낸다', 2013.6.18, <뉴스핌>
- 8) '토요가산제 도입, 의원 4.5% 수가인상 효과', 2013.6.19, <약업신문>
- 9)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 '지도'를 '처방'으로...법개정 추진', 2013.6.18, <라포르시안>
- 10) "'지역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수반돼야', 2013.6.21, <메디컬투데이>
- 11) "'비만은 질병"...건강보험 적용 논의 다시 불붙나', 2013.6.21, <라포르시안>
- 12)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확대...내년부터 간병비도 지원', 2013.6.21, <라포르시안>
- 13) '김종대 이사장, "연말까지 부과체계 개편안 도출"', 2013.6.21., <청년 의사>
- 14) '건보공단 '한지붕 두가족' 양대노조 내년 10월 통합', 2013.6.18, <데일리팝>
- 15) '노사 갈등 남원의료원 차기원장 촉각', 2013.6.19, <데일리메디>
- 16) '의료-치과계, 피부레이저 시술 두고 대립 '심화'', 2013.6.22, <메디파나뉴스>
- 17) "'수가가 엉망이니 치과 의사·한의사까지 영역 침범"', 2013.6.21., <청년 의사>
- 18) '인도 제약사 선 파마, 미국에서 글리벡의 제네릭 판매위해 노바티스에 소송 제기', 2013.6.18., 정보공유연대
- 19)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 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의약품 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 2013.6.18., 정보공유연대
- 20) '김미희 의원 "글리벡400mg 보험 등재 필요" 지적', 2013.6.21, <약업신문>
- 21) '美, 잘못된 약물복용 탓 年 2,000억弗 "줄줄"', 2013.6.21, <약업신문>
- 22) '자궁경부암 백신 잇단 부작용... 효용성 논란', 2013.6.22, <코메디닷컴>
- 23) '건보공단 "공공제약사 설립 가능성 검토"', 2013.6.22, <데일리메디>
- 24) "'日, 의사 제네릭 처방시 인센티브 제공"', 2013.6.22, <데일리메디>
- 25) '논란 커지는 '빅딜설'...일부 시도의사회 반발 움직임', 2013.6.20., <청년 의사>
- 26) '대만서 H6N1형 AI 첫 인체감염 사례', 2013.6.21., <연합뉴스>
- 27) '전 의총 "건보재정 흑자 의원 활성화에 투입하라"', 2013.6.21, <메디파나뉴스>
- 28) '전공의들 "원격의료 허용 법안 '육상옥' 철회 요구', 2013.6.22., <청년 의사>